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미국·한국 정부에 있다

관련 기사 4면

세계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다
코로나19와
세계적 저항

5~8면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인종차별 반대 투쟁

10~11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4면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자와
수혜자

3면

정부·여당
민주주의
침해하는 민주당,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2, 9면

• 현대중공업
대의원 징계
•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12면

온라인 기사
윤미향·정의연 논란
진보진영의 그린뉴딜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 통합당 의원 신보라 임명 출셋길만 쫓아 온 우파 대변인

정세균 국무총리실의 산하 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출신이자 전 국회의원(20대) 신보라가 위촉됐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할 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위원은 40명 규모로 정부 측과 민간 위원이 절반씩 차지한다.

노골적인 반노동·친기업 성향의 신보라 임명설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조들과 민중당이 즉각 반발했다. 신보라는 20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개혁에는 나서서 반대하고 개약에는 적극 찬성해 왔다.

특히, 2017년 11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퇴직금 인상 개정(퇴직공제부금을 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혼자서 끝까지 반대해 무산시켰다.(물론 표결로 처리하지 않은 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 건설 노동자들이 퇴근 시간 마포대교를 점거하며 격하게 항의했던 바로 그날이다. 이 투쟁 직후 건설산업연맹 장욱기 위원장이 구속됐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개약과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에도 앞장섰다. 황교안의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화 발언도 적극 나서 옹호했다.

신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우파 활동을 해 온 출세 지향적인 우파 정치인이다. 그가 의원이 된 것은 2016년 총선이다. 친기업 우파 청년단체 활동을 이끈 공로로 박근혜의 공천을 받았다. “청년 정치” 운운하면서 말이다.

신보라의 고향이 전남 광주이고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우파로서는 드문) 지역 배경도 공천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지난해 초 자유한국당 김진태 등의 5·18 망언이 문제가 됐을 때 당대표 황교안과 함께 광주를 찾아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신보라는 대학생 시절부터 출세 지향적으로 우파 활동을 해 왔다. 대학생용 우파 무가지 신문사에서 일했던 신보라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등을 지냈다. 우파 정부 하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던 우파 청년(시민) 단체들은 우파 정권의 관련 단체에 가까웠다.

청년 대변? 친자본 응원 부대

신보라는 임금파크제 도입, 공무원연금 개약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약을 할 때마다 이를 응원하는 청년 단식, 청년 인터뷰, 청년 간담회 등에 단골 패널로 등장했다. 물론 매번 레퍼토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청년의 미래를 위해 노조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친자본 노동 개약의 응원 부대 구실이었던 것이다.

이 단체들은 그렇게 한 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재정 후원을 받았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 청와대가 나서서 전경련에게 이 우파 단체들의 리스트를 주고 재정 지원을 부탁했다. 이 문제로 나중에 청년이 여는 미래 등은 압수수색도 당했다. 재판에서는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상철·허현준(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모두 직권남용 등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정권의 혜택을 받고 국회의원까지 됐지만, 신보라는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신보라의 청년이 여는 미래는 리베이트 의혹도 받았다. 정부 보조를 받아 행사를 열면서 식비와 숙박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에 일부를 업체에게서 돌려 받는 식으로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신보라는 ‘시대정신’이라는 우파 모임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정신은 김영환 등 우파로 전향한 옛 친북좌파 운동가들이 만든 뉴라이트 모임으로 1990년대 전북대 학생운동 일부가 전향해 여기로 합류했다. 이런 전향을 이끌었던 것이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했던 허현준 등이다. 허현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도 우파 단체들의 관리자로 등장한다. 2000년대에 전북대를 다닌 신보라는 당시 뉴라이트 운동을 공개적으로 띄우던 이 라인의 후원을 자연스럽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보라는 올해 4월 총선에선 경기도 파주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민주당 측에선 40명이나 되는 위원 중 한 명이고 여야 협치 차원의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이번 임명을 변호한다. 그러나 신보라 같은 이가 협의체에 있으면 논의가 산으로 가거나 기껏해야 (양극단은 자제하자는 식으로) 개혁적 목소리의 힘을 빼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신보라 위촉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이나 진보적 청년 정책에는 진지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김문성

노동개약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규제 혁신”과 노동 개약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노사정 “협력” 운운 하더니, 친기업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고 있는 동안 이미 개약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면서 노동 개약 박차 가하는 문재인 정부

특별연장근로 또 개약: 인가 사유에 이어 기간 확대

6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간 90일 동안 주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기한을 더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존 상한인 90일에서 기한을 더 늘리거나 특별연

장근로 사용 일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필요” 등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경영상 필요”는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어서, 노동시간 규제를 허무는 데 특화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미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엄청난 업무량에 탈진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만이 아니라 그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 존중”은커녕 철저히 기업주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의지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최저임금 또 억제 시동: “속도조절” 군불 때기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수준인 상물을 기록했다. 올 들어 더 심해진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도 모자란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하겠다고더니,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억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6월 16일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최근 2~3년 동안 급격히 오르면서 (포용 성장)이 역풍을 맞았다”면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부담이 과도한 것은 최근 들어 속도를 조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갑 노동부 장관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에서 “경제·고용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감소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기업주들의 앓는 소리에 편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하랬더니 되레 의료영리화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유행을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게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기보다 되레 원격의료 도입에 혈안이다.

6월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술 진보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받아

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 의료기기 작동 오류가 환자에게 미칠 위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것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의료 산업 기업

들의 이윤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치료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혁신성·잠재성”이 있다면 시장에 진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의료 기기의 효과와 안전성이 아니라 수익성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규제완화: 개인 정보 팔아넘기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 금융·보건의료 등 기업의 돈벌이를 돕는 데이터 3법을 올해 초 개정했다. 그리고 이 법의 활용을 높이려고 시행령, 고시 등 후속 입법을 추진 중이다.

6월 16일 행안부는 그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정부가 낸 개정

안보다도 더 후퇴했는데, 기업주들의 규제 완화요청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특히 기업주들은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야 보험, 의료 상품 등 판매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기업도 가명 정보를 조합할 수 있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에서 정보를 결합한 후 외부로 반출할 수 없게 했던 3월 개정안의 내용을 없애 개인 정보 반출도 허용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안전 위협하는 화학물질 규제완화

정부가 6월 11일 발표한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방침도 담겼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75일 → 30일), 연구개발용 물질 등록(유해성 심사, 평가) 면제 처리 기간을 단축해 주는 내용이다. 즉, 기업이

화학물질을 다룰 때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용량을 변경하게 될 경우 ‘선 검사, 후 시설 가동’ 방침을 바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우선 시설부터 가동한 뒤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려 한다.

하지만 “경미한 변경”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화학물질 특성 상 경미한 변경조차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안전을 뒷전에 두고 생산(시설 가동)을 우선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자와 수혜자

장호중 의사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며 방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의 10퍼센트를 넘고, 특히 취약한 노인 환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이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병상 수 부족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주요국들이 경제 활동 재개 신호를 보내면서 급반등하던 주가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다시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는 일부 자본가들도 울상을 짓게 만들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업주들이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이윤을 꺾어모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졌다.

기업주들은 정부의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으로 내몰았다. 이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동시에 노

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외면하고 있다.

쿠팡 같은 물류 기업들이 한 사례다. 쿠팡의 부평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지자 사측은 “어려운 시기”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쿠팡 대표 김범석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다.

쿠팡의 올해 1분기 온라인 결재액은 4조 8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전체 매출을 뛰어넘는 실적이다. 1월에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3.5퍼센트, 2월에는 23.4퍼센트, 3월 26.3퍼센트 성장했다.

그러나 쿠팡 노동자들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다. 물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3월 12일에는 쿠팡 배송 요원이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코로나 이후 배송물량이 폭주해 한 사람이 하루에 물건 300개를 배송하고 있었다고 한다.

쿠팡 노동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콜센터, 돌봄교실 등 또 다른 저임금 일자리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자기도 모르는 새 동료와 가족들을 감염시켰다.

이런 현상은 국제적이다. 쿠팡 대표

김범석이 '롤 모델'로 따르고 있는 세계 최대 물류업체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3월 18일 이후 자산이 362억 달러(약 43조 6065억 원)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가해 정부와 기업이 '한 배를 탄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배의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고, 일부는 아예 배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사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평범한 노동자들은 해고, 무급 휴직, 차별에 이어 항의할 권리도 공격 당하고 있다 6월 17일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기자회견



문재인은 기업주들에게 '한 배를 탄 운명'이라며 손을 내밀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

해고된 노동자들

3~5월에 실업자가 127만 명 늘었다. 임시근로자(50만 1000명), 일용근로자(15만 2000명)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은 언제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사실상 실업 상태로 내몰렸다.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덤프트럭, 화물차, 택배, 셔틀버스, 퀵서비스, 대리기사, 배달업 노동자, 학습지·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사, 철도 매점 노동자, 경마기수, 재택집배원 등 일상에 흔히 마주치는 노동자들이다.

보육·돌봄 노동자들과 가사노동자(가정관리사)도 일이 줄면서 소득이 크게 줄었다.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도 분류되지 않아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받지 힘들다. 서울시는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삭감하는 계획을 내놔다.

기업주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지출을 아끼지만 노동자들은 소득 절벽으로 생계가 위태롭다.

아시안나케이오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않고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으로 내몰았다. 무급휴직도 희망퇴직도 거부한 노동자는 해고됐다.

배달 노동자들

코로나19로 배달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실직자들이 대거 배달 노동자가 됐다. 1~4월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는 신규 기사가 갑절로 늘었다. 이기간에 배달건수도 627만 건에서 982만 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올해 4월까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

병원 노동자들

문재인 정부는 병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영웅'이라고 했지만, "확진자가 줄자 일부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급휴직을 강요받았다. 심지어 검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라는 경우도 있었다."(보건의료노조, 6월 5일)

간병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산재보험도 적용

장애인들

장애인 확진자들은 장애인용 화장실도 없는 격리시설로 보내졌다. 주변에 지인이나 활동가가 없는 경우 한참을 굶는 경우도 많았다.

"청도대남병원의 5층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102명 전원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월 25일

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퍼센트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게 이륜차 사망사고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3월 12일에는 쿠팡 노동자가, 5월 4일에는 CJ대한통운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되지 않는다.

"간병노동자들은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고, 고령자가 많고,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부상 위험이 높다. 그런데도 간병노동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5월 27일)

일곱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보건당국의 방침은 5층 밀집수용 상태 그대로 환자들을 '코호트 격리'하는 것이었다. ... 환자이송이 끝난 것은 3월 5일이었다 ... 이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었다."(우석균)

더 부유해진 자본가들

헤지 펀드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자본가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붙잡아 부를 늘렸다. 헤지펀드는 민간 투자자들을 모집해 화폐, 상품,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다.

세계 증시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동안 이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었다. 6월 2일 프라임브로커 리지서비스(PBS)는 올해 수익률 상위 20개 코스닥벤처펀드 유형의 헤지펀드 평균 수익률이 30.5퍼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44퍼센트가 넘는 펀드도 있다.

물류 기업들

상반기에 수익을 늘린 것은 쿠팡만이 아니다. 국내 택배시장 1위인 CJ대한통운의 1분기 영업이익은 5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성장했다. 매출액은 3퍼센트 성장해 2조 5154억 원을 기록했다.

또 다른 집단감염 우려를 낳고 있는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도 같은 기간에 매출액은 124억 원, 영업이익은 44억 원 증가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8퍼센트에 이른다.

바이오 기업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경쟁에 수많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뛰어들었다.

3월 16일 최초로 코로나 백신인 간 실험을 한 모더나(Moderna)의 CEO 스테판 밴셀의 순자산은 103퍼센트 늘어 현재 약 15억 달러(약 1조 8442억 원)가 됐다.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의 주식 가치는 5월 말 현재 1월 대비 2조 원(81.3퍼센트) 폭증해 4조 8967억 원이 됐다. 씨젠의 올해 영업이익은 2481.3퍼센트 늘 것으로 전망됐다.

부자들

6월 5일(현지 시각) 미국 CNN 보도를 보면, 미국 갑부들의 재산은 3월 18일보다 19퍼센트(약 680조 원) 증가해 3조 5000억 달러(약 4216조 원)에 이른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재산은 3월 18일 이후 무려 362억 달러(약 43조 6065억 원) 늘었다. 아마존 주가는 3월 중순 대비 47퍼센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의 순자산은 301억 달러(약 36조 2584억 원) 증가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말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폭파가 이뤄졌다.

그전부터 북한 김정은 정부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가 ‘적대 행위 중지’를 약속한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고,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다.

그래서 이번 폭파는 북한 김정은 정부가 공언한 연속적 행동의 일부인 셈이다. 6월 4일 김여정은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외에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6월 13일 이렇게 밝혔다.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 주려고 한다.”

6월 17일 오전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할 것이며, 2018년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GP)를 다시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서남해안 등 접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훈련 재개를 알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북한 당국이 공단 입주와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휴전선 인근 군대를 철수시킨 곳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곳이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 까닭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 북한 군대가 들어오게 됐다.

더 중요하게도,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지에서 남북이 충돌할 위험이 커졌다. 이곳들은 비교적 최근까지 남북이 여러 차례 충돌한 곳이었고, 이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해진 적이 많았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런 위협을 방지하자고 맺은 합의였지만, 이번 사태로 그 합의는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이로써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들은 사실상 모두 파기됐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과거 대결 상태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성공단

피상적으로 돌아가는 형세를 본다면,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주된 원인으로 보일 것이다. “화가 난다고 밥상을 모두 엮어버리는 행동”일 테니 말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상황을 관찰해 보면, 그림은 다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개성공단, 개성공단 폐쇄, 개성공단 폐쇄

한미동맹 중시하며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해 온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 6월 16일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선,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도발’이라는 지적들이 나왔지만, 사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사일 경쟁을 주도하는 쪽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북한보다 더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이런 경쟁 압력에서 북한이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번 열렸음에도 북·미 관계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주로 중국을 겨냥하나 북한 국가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 북한 점령 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진행됐다.

대북 제재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지난해 하노이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연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일부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북·미 관계를 서두를 필요 없다며 북한의 선 비핵화를 고수해 왔다. 제재와 미국의 군사 위협에 시달리는 북한 당국 처지로선 북·미 관계의 교착으로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 국제 대북 제재의 선을 넘지 않고 그것에 협력했고, 북한에 중단을 약속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했다.

지난해 1월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름에 역대급 군비 증강 계획을 내놔다. 결국 10월에 김정은은 금강산 남북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6월 15일 대통령 문재인이의 메시지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답변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대화의 창을 닫지 말자면서 남북이 “작은 일부터,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

자고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북관계는]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김여정이 “제재의 틀 안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철면피한 감언이설”만 늘어놓는다고 비난한 까닭이다.

이런 맥락을 보면, 한반도를 불안게 하는 주된 원인을 북한의 “이해하기 어려운 과잉행동”으로 보는 것은 심각하게 전도된 시각이다.

식량 사정 악화

최근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려워진 점도 북한이 대북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 배경인 듯하다. 6월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벌어지자 북한 당국은 국경을 막아야 했고, 이 때문에 교역이 원활하지 않게 됐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제아 퀸타나는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해 북한이 “심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을 규탄하며 북한 곳곳에서 군중대회를 여는 것 등은 모두 이런 내부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북한 대중의 불만에 대처하는 데 고심하는 북한 당국이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의 적 탓으로 돌려 내부 결속 효과를 얻으려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남북 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일부 우파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고 한다. 현 시점에서 이런 행동은 자칫 남북 간 무력 충돌까지 부를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다.

그러나 진보·좌파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제재 논리는 우리 편을 향한 무배량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

포에 반대하는 행동을 지지하거나 진보·좌파가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맞불 시위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 정부들의 합의로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현 상황은 매우 곤혹스런 변화다.

그런 가운데 많은 진보 단체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맺은 남북 합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보조를 맞춰 온 점 등을 옮겨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태도를 바꿔 남북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라고도 촉구한다. 즉, 미국과 친미 우파에 더는 휘둘리지 말고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아가 남북 합의들을 이행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지난 2년여의 경험을 돌아봐도, 진보가 문재인 정부를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설득하고 변화를 촉구할 만한 대상으로 보서는 안 된다는 증거는 정말 많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단계적 군축”을 약속해 놓고,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도입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협력하고 한국 미사일방어체계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연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었고, 남한(특히, 민주당 정부들)을 향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접근은 계속 실패해 왔다. 합의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새로운 명분을 앞세워 합의를 깨기 일쑤였고, 남한 민주당 정부들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남북관계에서 후퇴하곤 했다.

한국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일원이고, 현존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나름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들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한미동맹을 통해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

국 지배계급의 정치세력이다. 민주당은 이미 세 번이나 집권했고,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제1 선호정당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지배계급의 유기적 일부로 자리매김해 있다. 미래통합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친제국주의·군국주의를 지향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봐야,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 같은 포퓰리즘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으로 국제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협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북·미 관계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다뤄 왔고, 그 점은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 북·미 관계 진전이 더딘 까닭이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 ‘한미위킹그룹’을 설치했고, 이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정책의 속도 조절을 계속 주문했다.

물론 지금 정부를 향해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여론 인사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도 한미동맹 문제 등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예컨대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2018년 5월 남북관계가 한창 좋을 때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강연회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을 향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지난 5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은 미국의 한 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이 중국을 적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여전히 한국한테 “최우선은 미국”이라는 얘기가.

따라서 제국주의에 맞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문재인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군국주의를 비판하고 반제국주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6월 16일에 게재한 기사를 17일에 업데이트했다.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

6월 13일(한국 시각),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을 주제로 공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소피아 비치가 의장역을 맡았고, 미국·독일·나이지리아·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발제를 했다. 다음은 그 발제를 녹취·번역한 것이다(발제 후 이어진 질의 응답은 추후 번역·소개할 예정이다)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내용이다. 영문 녹취를 해 준 이예송·천경록·한가은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코로나19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이 체제의 부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6월 3일 워싱턴 시위에 참가한 의료인들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활동가 야니스 델라토라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시위에 참가한 간호사의 사진이 인터넷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간호사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웠다. 이제 경찰에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지금 미국 상황을 잘 포착한 구호입니다.

인종과 계급은 지금 벌어지는 인종 차별 반대 투쟁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심지어 시위가 일어난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소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州) · 앨라배마주 · 테네시주 등에 있는 미국 남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금령이 떨어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랑곳 않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급진 좌파가 제철하던 요구들이 하루아침에 주류가 됐습니다. 경찰 개혁, 심지어 경찰 해체 같은 요구들이 그런 사례죠.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은 개혁을 약속하며 허둥지둥 운동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시 시장은 뉴욕시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몇몇 동지들과 1990년대 초에 뉴욕에서 벌어진 어떤 운동에 참가했는데, 당시 요구 중 하나도 바로 경찰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항은 시작된 지 두어 주밖에 되지 않았죠. 이번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 줍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경찰을 개혁할 수 없으니 해산하자는 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의 본질에 관해 말할 때 하는 말이지요.

물론 지배계급이 경찰을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항쟁이 분출하는 시기에 말이지요. 하지만 다

시 말씀드리지만, 당국에게서 이런 양보를 이토록 빨리 끌어냈다는 것은 이 운동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텍사스주 엘파소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 시설에 갇힌 이주민들이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감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대단한 연대의식과 국제주의의 표현입니다. 또, 단식투쟁은 지금 벌어지는 항쟁이 이주민 권리 보장 운동, 이민세관단속국 폐지 운동과 연결돼 심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줍니다.

연대

지금 벌어지는 항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 시절 분출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미국에서 흑인 해방을 위한 투쟁은 흑인 평등권 운동 시기의 시위와 마틴 루서 킹, 맬컴 엑스 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전투적으로 발전한 닷지혁명적노동조합운동(DRUM) · 흑표범당 같은 혁명적 조직도 있었죠. 지금 여기서 그 역사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미국에서 흑



야니스 델라토라스

인 해방을 위한 투쟁에 풍부한 급진적 전통이 있음은 특기할 만합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3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한 것은, 오바마 정부가 경찰의 인종차별적 살해 문제에 대처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흑인 청소년 트레이빈 마틴을 살해한 범인이 무혐의로 풀려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흑인 청년 에릭 가너와 마이클 브라운이 인종차별적 경찰에 살해됐죠. 이 두 사건의 범인들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들이 벌어졌죠. 당시 뉴욕에서는 약 5만 명 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유럽에서도 연대 시위가 있었죠.

지금 벌어지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당시 시위들보다 정치적으로 더 급진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반항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경찰서들이 불탔습니다. 현재 시애틀의 캐피톨 힐 지역 관할 경찰서는 시위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경찰서를 비우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캐피톨 힐 자치구’로 불립니다. 사회주의자 시의원 크사파 사완트가 여기서 행진을 이끌었고 이곳을 계속 자치구로 남겨 두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동자들도 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호사노동조합, 우편노동자노동조합, 항공승무원노동조합 등의 노조 조직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도장공산업연맹노동조합(IUPAT) 노동자들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에 연대해 미국 노총 AFL-CIO 본부 건물 앞에서 팻말 시위를 했습니다. 이 시위는 AFL-CIO

가 산하 경찰노조를 제명하기를 거부한 데에 항의하는 시위였습니다.

미국 지배계급은 운동의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트럼프는 이 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목했습니다. 사실 이는 괴이한 일이었는데, ‘안티파’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티파’는 반(反)파시즘 활동가들의 느슨한 네트워크이며 이들의 정치는 극우를 타격하는 데에 최상의 정치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극우와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좌파와 운동을 공격하라는 거죠.

지배자들의 분열

그러나 분열은 지배계급 내에서 나타났습니다. 군 장성들과 최고 군 관계자들은 연방군을 투입해 항쟁을 진압하자는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군대의 기층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시위 진압 목적으로 투입되기를 거부하는 주방위군 병사들이 있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군 장성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결코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여전히 위험 인물입니다. 극우와 파시스트를 부추기기 때문이지요. 극우 성향 트럼프 지지자들은 시위대로 차를 돌진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디트로이트 등지에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와중에 이 항쟁이 벌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무대응 때문에 코로나19가 추적이 불가능할 만큼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대유행이 절정일 때도 뉴욕시에서는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

다. 간호사들도 보호 장비도 없이 일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대대적인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죠.

뉴욕시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퀸즈나 브롱크스 같은 노동계급 지구입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계급 사람들, 라틴계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이 미등록 이주민이라 정부가 지급하는 1200달러 재난지원금을 자격 미달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일하지 않고] 집에 있을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위기 시기에 도시를 계속 가동했던 필수부문 노동자들도 있죠.

뉴욕주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쿠오모를 무슨 영웅처럼 취급하는데요. 쿠오모의 코로나19 대처도 너무 늦었습니다. 학교 휴교는 교사 노동조합이 주지사와 시장을 압박한 결과입니다. 분노스럽게도 쿠오모는 심지어 전염병 대유행이 심각하던 5월에 [‘메디케이드’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 긴축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 장애인 대상 의료보험)는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즉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의료보험인데도 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부족, 1930년대 대불황을 방불케 하는 대량 실업 등 이 모든 것이 이번 항쟁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치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버니 샌더스의 선거 도전이 패배한 것입니다. 샌더스에게서 해결책을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했습니다.

물론 샌더스 선거 도전은 사회민주주의적 운동이었

▶ 5면에서 이어짐

치적 중요성을 파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겐 샌더스 선거 도전이 패배했기 때문에 전에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시위에 나온 것일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들과 노동자들의 합류는 이 항쟁의 지속성을 키우고 다른 운동들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니아폴리스 집배원 노동자들은 투쟁 초기부터 “우체국 노동자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라는 현수막

을 들고 대열을 지어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뉴욕과 미니아폴리스의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연행된 시위대의 운송을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운 노동자들은 항쟁에 연대하는 뜻에서 서부 해안 항구 29곳을 폐쇄하기로 표결했습니다. 미국 곳곳의 교사 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에서 경찰을 쫓아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이 운동에서 할 아주 중요한 구실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 인

종차별을 토대부터 뒤흔들 훨씬 더 급진적인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인종차별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에도 도전하고, 이주민을 비롯해 천대받는 모두를 위한 사회 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기여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과 흥미진진한 사례 전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디링케(좌파당) 소속 국회의원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고통 전가에 맞선 강력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당한 현실을 전보다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독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도, 코로나 대책은 빈곤층과 저소득층, 하위 중산층에게 주로 영향을 줬습니다. 병원과 마트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사회를 지행하는 한편, 전부터 문제를 일으켜 온 의료 민영화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노조들이 간호사 15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니, 이곳 현실이 어떤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의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독일 정부가 강요한 긴축 재정정책으로 보건 체계가 무너진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난민 유입을 배척하는] ‘유럽 요새’의 외곽에 있는 난민촌의 끔찍한 현실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EU와 독일 정부는 수십억 유로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주로 자본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겁에 질려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독일 경제는 올해 6.6퍼센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에는 수출이 31퍼센트나 줄었습니다.

코로나19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

이러스는 방어쇠 구실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경제는 회복 없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고, 낮은 이윤 전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정부들, 그리고 이제는 EU 집행위원회도 자본주의를 구하려고 앞다퉈 빚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7500억 유로[약 1027조 원]짜리 유럽 회복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죠. 3월에 독일 정부는 긴급 자금 수혈과 대출 담보 제공, 감세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주로 기업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를 전에는 1300억 유로[약 178억 원]짜리 추가 경기부양책도 발표했습니다.

기업 퍼주기

정부가 기업들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그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금지, 배당금 지급 금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개개의 투자자들에게서는 결코 받을 수 없었을 투자를 정부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90억 유로짜리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이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갑절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독일 정부의 위기 대응책의 체계적 성격을 특별히 뚜렷하게 보여 주는 사

례인데, 독일 정부는 그 돈으로 루프트한자를 국유화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경영진과 주주들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당 디링케는 기업 구제에 사회적·생태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루프트한자는 [철도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국내선을 없애지 않고 있고, 이를 전에는 2만 명이상을 감원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기업 살리기 정책의 이런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계급이 일부 수혜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런 정책들로는 근처에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지적했듯이 수익성과 이윤율은 계속 낮게 유지될 테지만, 부채는 갈수록 커질 것인데, 대대적인 차입이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고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경기 침체의 새로운 국면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에게는 구제금융뿐 아니라, 착취율을 높여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 사활적입니다.

이미 독일에서 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주들이 파는 공작은 정부의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3월 7일 난민 입국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독일의 시위대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경기부양책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겪을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속산업사 용자연합은 자신들이 보기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대한 사회적·정치적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들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부담 아니라, 착취율을 높여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 사활적입니다.

이미 독일에서 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주들이 파는 공작은 정부의

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독일 자본가들은 국가가 주는 돈을 받기면서 국가가 이윤을 조금이라도 제약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직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메르켈 정부는 현재로서는 아주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속근로지원금과 중소기업체 보조금 덕분에 큰 지지를 받고 있죠. 예컨대, 지금 독일에서는 정부의 결정으로 730만 명이 단속근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은 수혜자인 셈이죠, 그러나 이 노동자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머지않아 실업자가 빠르게 늘어나 300만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들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이 치르도록 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다가를 위기에서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좌파와 좌파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좌파당과 노조 집행부의 다수는 새로운 상황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는 데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휴전의 정치’라는 문제가, 특히 노조 지도자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반사회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맞서 투쟁하기보다는 정부와의 협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반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간호사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남부의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폐업에 맞서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축 산업의 끔찍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 부문에서는 동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죠. 어떤 도축 시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적인 투쟁들을 전체적인 투쟁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라는 요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전가에 맞서 노동계급의 연대를 건설하려는 투쟁은 모두 우익과 네오파시스트들에 맞선 투쟁이어야 하고, 그들이 이 위기를 틈타 인종차별을 퍼뜨리고 소수집단들에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저지해야 합니다. 독일에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반영된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종차별을 내세운 여러 운동이 부상했고, 그중 특히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부상하여 파시스트 정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무된 우익 테러리스트들이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시스트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광범한 운동도 형성됐습니다. 극우의 온상인 AfD는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파시스트 반대 시위들이 일어난 2018년 이후 수세적 태세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AfD는 코로나 국면에서 처음에는 난민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비난하며 늘 그랬듯이 국경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소용없고 그런 요구가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자 정부의 접촉 금지령에 반대하며 사람들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지금 AfD 안에서는 노골적인 파시스트 분파와 우익 민족주의 분파가 주도권을 놓고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가사회주의[나치] 운동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일부는 보수 정당인 기민당(CDU)과 연정을 꾸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익이 얼마나 강해질 것인지는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의 투쟁과 동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의 고통을 전기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독일에서는 10만~20만 명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는 좌파적 운동의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전에도 독일에서는 기후 운동,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운동이 그런 잠재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운동의 일부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해 국제주의적 대응을 요구하고, 인간과 자연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영국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조셉 추나라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아니스가 제시한 물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쩌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국제적 항쟁을 촉발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67개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브리스틀 시(n)에서는 시위대가 노예무역상의 동상을 끌어내렸고, 런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누군가의 숨통이 경찰관의 무릎에 9분 동안 짓눌려 있는 영상은 정말 참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잔혹상은 전부터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경찰에게 죽은 사람은 1098명에 이릅니다. 흑인이 경찰에게 죽을 가능성은 백인의 세 배였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 매주 나옵니다. 역시나 흑인과 소수인종의 비율이 높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문제로 기소된 경찰관이 1969년 이래 두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세기가 넘도록 이런 상황이니 이중 되면 흔한 말로 몇몇 색은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게 됩니다. 통 전체가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죠. 국가기구는 속속들이 인종차별로 물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위로부터의 인종차별로 물들어 있죠.

악취

이런 점에서, 정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사람들 일부가 앤절라 데이비스나 랠프 엑스의 길을 따르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인물은 체제 전체가 문제라고 봤고 혁명적 변화를 촉구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앤절라 데이비스는 “자본가 계급을 모두 완전히 타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세계적 수준으로 벌어지

고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분노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우리가 말했듯, 코로나19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적대와 모순을 더 첨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긋지긋한 인종차별적 체제가 인간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고 거기에 방해 되는 모든 사람을 짓밟는다고 말합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가 외친 “숨을 못 쉬겠어요”라는 구호는 코로나19 희생자에게도 딱 들어맞는 구호입니다. 영국에서 줄줄이 목숨을 잃는 간호사, 버스 운전사, 마트 노동자들도 압도 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흑인들입니다.

오늘[6월 13일] 영국에서 들려온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영국국가 협회는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어, 흑인

과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다른 부분이 공식 코로나19 보고서에서 왜 삭제됐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수치를 보면 정부가 왜 그랬는지 짐작이 갑니다. 영국에서 흑인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백인의 네 배

▶ 8면으로 이어짐



조셉 추나라

나이지리아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바바 아이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인 다른 세계를 쟁취해야 합니다”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가 했던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명이 존재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가 무엇 이냐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냄비나 그릇 같은 유물을 기대했죠. 그러나 미드는 유적지에서 발견된 1만 5000년 전 인간의 대퇴골을 언급했습니다. 그 뼈는 부러졌다가 치료받고 회복된 흔적이 있는 것이었죠.

그런 점에서 한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한 사회인지를 알려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는지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 노동자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특히 지난 몇십 년 동안 받은 처우를 보면

자본주의가, 특히 신자유주의적 형태가 얼마나 야만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07~2009년 대침체 이래 거의 모



바바 아이

든 나라에서 보건 재원이 급격히 삭감됐습니다. 인력이 감축됐고 임금이 동결했습니다. [보건 노동자들이 겪는 이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건 노동자들의 건강이 등한시됐습니다.

이제 각국 정부들은 보건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꺼서 함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건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일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우선순위에 따른 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제 기구에 관해 자주 하는 말을 들어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가 어디에 돈을 대고 실제로 무엇을 지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세계의 시위 진압 경찰을 보십시오. 경찰관 한 명을 무장시키는 비용이면 보건 노동자 31명이 쓸 보호장비 일체와 호흡 보호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발표된 개인 보호장비 지침은 하향 조정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 노동자들이 호흡 보호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일부 사람들만 쓰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리고 그런 지침을 보면 언제나 “가용” 물자 부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동자들은 여기에 반대해 왔습니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내놓은 지침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모든 보건 노동자가 호흡 보호구를 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미 제기했는데도 말이죠. 주되게는 “가용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용” 물자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미 필요한 것보다 많은 돈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주들이 이윤 획득에만 골몰해 있고, 정부가 기업주들이 호흡 보호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일부 사람들만 쓰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리고 그런 지침을 보면 언제나 “가용” 물자 부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익은 뒷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뒷전입니다.

저들은 돈이 열리는 마법 나무는 어디에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세금 도피처에는 36조 달러에 이르는 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소수 억만장자들은 재산이 53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재원이 생명을 살리고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72년 전 WHO가 결성됐을 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됐습니다. 그 이후 [유엔 등에서] 유명한 선언들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1990년까지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2000년에는 “모두에게 건강을” 계획, “새천년 개발목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계획 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룬다티 로이가 분명하게 말했듯이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도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제

제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말이죠. 점진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줄 뿐인 것일입니다. 물론 그들은 진정으로 그런 변화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튼소리일 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이 정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아프리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아말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적은 곳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큰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민영화, 규제완화, 상업화 등의 결과로 아프리카의 공중보건 체계는 다른 어느 곳보다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보통 영국의 대처 정권이나 미국의 레이건 정권에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기관들이 신자유주의를 추진하

기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시작은 세계은행의 1981년 보고서[비그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보건 서비스에 이용자 부담 제도를 도입하라고 가장 먼저,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 실상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가뜰스나 심각했던 빈곤은 더 악화됐고, 이제는 최악에서 ‘최악’ — 그런 말이 있다면 — 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기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공중보건 위기가 아닙니다. 사회·경제적 위기이고, 세계적으로 상이한 차원·지역들에서 진행되는 위기입니다.

예컨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 중단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에서도 남아시아처럼 노동인구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 부문에 속해 있어 가진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 대책은 대체로 이런 기업주들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부보다 사람들의 건강을,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인 다른 세계를 위해 주장하고 행동하고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세계를 쟁취하려면 대중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시위가 일어나고 파업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파업의 대부분이 비공인 파업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런 파업들은 노동조합 공식 관료기구에 불복하여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반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격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저 어떤 개혁이냐 허울뿐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노동계급의 혁명적인 자녀들과 청년들이 다가오는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 7면에서 이어짐

었습니다. 저와 같은 서남아시아인의 사망 가능성은 백인의 두 배입니다.

이런 차이가 유전적 요인에서 비롯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론은 전혀 쓸모 없습니다. 흑인은 일선에서 일하거나 비좁고 위생이 나쁜 집에 사는 경우가 다른 인종보다 훨씬 많고, 인종차별과 빈곤에서 비롯하는 온갖 스트레스와 긴장에 시달리며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흑인 중에 사망자가 많은 것입니다. 인종과 계급은 나이 다음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핵심 결정 요인입니다.

야니스가 말했듯이 적대는 깊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4000만 명이 실업자가 된 마당에 경제 상황을 내세워 올 가을에 재선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긴장을 고조시켜 인종차별과 국수주의로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미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권이나 인도의 모디 정권도 위기에 대응해 인종주의와 국수주의를 동원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이런 패턴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투쟁에서 다른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며칠 간의 대규모 시위가 수십 년에 걸친 점잖은 교섭이나 선거 운동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선 덕분에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데릭 쇼빈과 그의 공모자들이 기소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오고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경찰 “해체”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경찰 예산 삭감 요구가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인종차별적인 사법 체계의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구는 좌파가 오랜 세월 요구해 오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부채질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나타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사회 외부에서 자연이 침투해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자연 재난이 아닙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동물 개체군에서 인간 사회로 건너오는 까닭은 자본이 자연으로 침투하고, 자본이 이윤을 얻으려고 자연을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농업 대기업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더 광범한 생태계 파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편,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회에 유입된 후 정부가 내놓는 대응은 체제의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상황이 특별히 나빴던 곳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신자유주의에 의해 자본주의적 논리가 심화된 곳이었습니

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이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적절한 감염자 검사·추적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많은 감염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양원들은 수십 년 동안 비용 절감 논리에 따라 동안 운영돼 왔고, 그래서 그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환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국제적 저항을 촉발했다. 6월 12일 런던에서 열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

자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사례는 피해가 가장 심했던 층에 속하지만, 자본주의의 논리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확인됩니다. 현재 세계 도처에서 업무 현장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의 흐름을 회복시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죠. 이미 유럽도 상황이 나쁘지만,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에서도 사망자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대대적인 조업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 잡기를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브라질·인도·미국 등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지에서는 지금 상황을 모면한다 해도 2차 유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투쟁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영국의 주요 교사노조인 전국교육노조(NEU)는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한 몇 안 되는 노조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는 초등학교를 개학해서 부모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전국교육노조는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것을 충족할 때만 학교를 개학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전국교육노조는 온라인에서 노조 활동가 모임을 소집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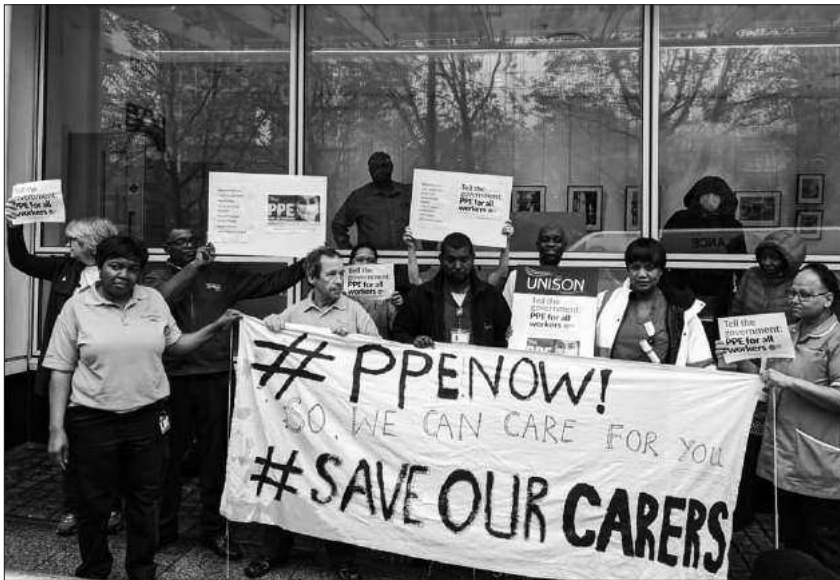
이 모임에 2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마도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원 모임이었을 겁니다.

정부는 6월 1일 초등학교 개학을 시도했지만, 기쁘게도 학생의 4분의 1만이 등교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저항이 정부의 계획을 망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져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투쟁은 작업 현장에서의 결정권을 둘러싼 투쟁의 일부입니다. 조업 재개를 할 만큼 안전한지를 누가 결정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작업 현장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를 둘러싼 투쟁인 것이죠.

야니스는 노동운동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적 직장에서 그 운동의 기풍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동상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나락에 빠뜨리는 사장들과 지배자들과도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투쟁도 그런 투쟁의 일부입니다. 단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싸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투쟁에 대비해 운동의 힘을 키우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한편, 코로나19는 현재 우리가 살면서 겪어 본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개인보호장비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영국 보건노동자들

2008~2009년 아래로 이 체제는 저금리, 양적완화, 구제금융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목숨을 부지하던 좀비 기업들이 다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려 하자 전쟁 때 말고는 유례가 없었던 수준으로 국가가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주에게는 사회주의가, 노동자에게는 자본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도산하면 그 기업에 돈을 퍼주거나 정부 지원 대출(공적자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안전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누가 치르게 될까요? 10년 전 지배자들이 은행 체제를 구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머지 않아 반드시 투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입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성장할수록 주류 좌파의 한계도 더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에는 노동당 신임 대표 키어 스타머 경이 있습니다. 브리스틀에서 시위대가 노예무역상인 에드워드 콜스턴의 동상을 끌어내려 강물에 처박아 버리자, 스타머는 시위대가 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마도 스타머는 동상을 강물에서 끄집어 내어 제자리에 놓고 위원회를 꾸려 그 동상을 10년이나 20년 동안 존치할지를 점잖게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타머 대표는 정부가 개학 계획을 그르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노동계급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과 정면 충돌하는 발언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 주류는 버니 샌더스를 이용하고 있죠. 바이든은 경찰들이 머리가 아니라 다리를 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찍지 않으면 흑인이 아니라는 말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

적으로 지각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스페인 정부 내에는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가 연정에 참여하고 있고, 경제 활동을 재개시키는 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들이 왜 이런 단체들에 기대를 거는지를 이해합니다. 저는 종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종차별과 코로나19를 둘러싼 투쟁에 뛰어들다면 기꺼이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자본이 허용하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삼종의 위기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세계적 유행병, 장기 침체, 그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생태 위기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올해 초가 어땠는지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고, 브라질 원시림이 불탔으며, 인도네시아에서 홍수가 났고,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마치 세계의 종말이 다가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자본주의 체제, 즉 경쟁적 이윤 체제와 연결돼 있고 그 체제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운동의 요구는 자본주의가 용인하는 한계 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체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해결책은 오직 아래로부터의 혁명적인 변화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를 공유하고 이런 정치에 공감하신다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출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유튜브 채널

녹취 김종환·이예송·전경록·한기은

번역 김종환·김준호·이원웅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김문성

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들을 줄줄이 내놔다.

양향자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민주당이 약속한 것이다. 이 법은 5·18 운동의 정의를 법 조항에 담아 왜곡 여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조만간 안을 다듬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친노·친문 인사인 정청래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언론사가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을 때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다.

역사 해석 독점?

이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우파가 뻔뻔하게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처벌받으면 좋은 일 아닌가? 표현의 자유가 막말의 자유도 아니고 말이다.

그러나 우파의 역사 왜곡은 분통 터질 일이지만 민주당의 입법 시도는 표현의 자유 일반을 위축시키는 반면 우파를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법들은 법 조항, 검찰 기소, 법원 판결 과정을 통해 국가가 획일적으로 역사 해석을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 해석을 법으로 통일시킬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 역사 해석이라고 해서 국가가 저자를 감옥에 보낸다면 그야말로 권위주의적 통치이다. 이것이 이명박의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 탄압이나 박근혜의 역사 국정교과서화에 진보진영이 반대했던 논리다. 이는 민주당의 입법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사건)을 놓고도 그것이 초래된 원인이나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 계급 기반이나 이념적 잣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에 따라 우리가 알던 진실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지나고 보니 특정 사건들의 맥락이 더 잘 이해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가령 한국전쟁은 발발 70주년이 지났는데도 다양한 해석이 논쟁 중이다. 민주당의 입법 대상이 된 일제 하 전쟁범죄, 광주항쟁,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보진영 안에서도 해석이 단일하지 않다. 또, 5·18 운동만 봐도 오로지 신군부의 살인적 진압 문제만 부각해 대중을 피해자로 간주하는 친민주당식 역사는 진정한 저항의 전통을 계승할 수 없다.

게다가 법이란 국회에서 제정·개정되는 것이므로 역사 해석이 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역사 해석이 공식정치 내 세력균형과 흥정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권력자들은 그때그때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역사 해석을 부각시켜 왔다. 이명박의 건국절 논란이나 문재인인의 임시정부 부각 등.

따라서 국가가 역사 해석을 법으로 규율하고 처벌권을 갖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일반을 억압할 수밖에 없다. 대중이 역사 해석과 표현의 능동적 주체



시발점 시작은 역사 왜곡 방지 같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이런 법들이 지지 속에 통과돼 자리잡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게 옥죄는 개악이 이어질 것이다

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노동 대중의 자력해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1980년 광주에 북한 간첩이 침투해 무장 저항을 주도했다는 주장처럼 사실이 아닌 주장은 처벌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런 허위 주장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공수설’의 주된 유포자인 지만원은 현행 법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처벌수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실 1980년 광주항쟁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주범은 진압 주체인 계엄사령부(신군부) 자신이었다. 그런데 여태 전두환 일당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역사왜곡금지법이 없어서였다? 아니면 민주당 정부가 그들을

사면하고 우대해 준 탓인가?

“악의적”보도가 문제인가

정청래의 언론 보도 손해배상 강화도 마찬가지다. 언론사가 악의적 왜곡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했는데, 악의성이 문제인지, 허위성이 문제인지 모호하다. 둘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삼성 재벌의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삼성그룹 측이 제기된 혐의를 허위사실이라며 보도를 자제하라고 강경하게 반발하는 일이 있었다. 정청래의 법대로라면, 이재용이 삼성그룹 경영권의 불법(탈세) 승계를 위해 뇌물을 주고, 주가를 조작해

합병을 한 일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도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좌파 언론은 악의성이 입증될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재판은 공론화가 될 뭇수록 이재용에게 유리할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특권형 부패 의혹에 민주당이 “악의적 보도 프레임”을 유포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같은 조치를 취해 정권 핵심부에 대해 비판적인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방해했다. 박근혜, 최서원(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폭로의 홍수 속에서는 기쁨을 느꼈던 친문계 정치인들은 문재인, 조국, 윤미향 보도 등에서는 관심법이라도 생긴 것처럼 모든 보도에서 “악의”를 찾아낸다.

표현의 자유 핵심은 비판의 자유

오늘날 국가를 운영하고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새삼스럽게 추구할 권리가 아니다. 가령 대기업주들은 경제 위기에 직면해 대량 해고를 실행하고 파업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경제관료, 미디어,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유포한다. 무엇보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

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분열·소외돼 있다. 일상 경험에서 가진 자들의 ‘갑질’에 무력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이 주입하는 상식(과 편견)이 사람들을 분열시켜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뭉쳐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고립된 개인들로 여긴다.

그래서 노동계급에게 표현의 자유는 시끄럽게 떠들며 사람들을 모으고, 기존의 상식에 의문을 제시하고 금기를 깨면서 단결과 투쟁을 전진시키는 수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민주당이 주인공인 의회 입법의 역사(로 5·18을 가르치는 것)로 제한하는 것일 뿐이다.

가짜뉴스가 번성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매체가 다변화됐기 때문인가? 그 점은 완전 부차적이다. 이는 가짜뉴스의 역사가 인터넷보다 수백 배 오래됐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제 장기침체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나라마다 경제·사회적 양극화, 복지 후퇴, 빈곤, 기후와 감염병 등 생태 위기 등이 심화하면서,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 생산 기관들(정부, 학교, 언론 등)의 신뢰가 크게 손상을 입었다.

각국 지배자들 모두가 가짜뉴스에 민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일, 프랑스 정부는 가짜뉴스 단속을 법으로 강화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강성 우파의 성장에 대응하는 중도와 지배자들의 기치가 가짜뉴스 척결이다. 우파가 상대적으로 더 가짜뉴스(대안적 사실)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이 우파의 가짜뉴스에 속아서 중도파를 불신하게 된 것이 아니다. 대중의 삶이 그들의 통치 하에서 파탄났기 때문에 우파의 허위 선동이 먹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이 ‘정상 학문’으로 자리잡은 것도 가짜뉴스와 과학 부정 등이 사회적 힘을 발휘하도록 길을 닦아 줬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객관적 진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객관적 진실 추구를 억압적 권력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체제의 실패는 지금도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다. 가령 코로나 위기에서 무명의 유튜브 전사들의 가짜 뉴스나 악의적 인터넷 게시물들이 문제였던가? 아니면 각국 정부들의 우스꽝스럽고 무능한 대응과 해명이 문제였던가?

미국 경찰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 살해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서 필요한 것은 가짜뉴스 단속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문제를 연결시키는 급진적 비판과 저항 호소의 자유인가? 폭동과 약탈이 문제이고, 투표로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분열을 부추길 가짜뉴스 단속을 중요시할 것이다. 그러나 인종차별 체제를 분쇄하려면, 더 많은 집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항의 전략과 전술을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도록 조직하는 일이 더 많이 필요하다.

리버럴의 보수화?

〈한겨레〉는 6월 10일 21대 국회 당선자 대상 성향 조사를 보도하면서, “자유권적 시민권의 핵심 영역인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리버럴 정당과 보수정당의 ‘태도 역전’이 일어난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서 예전보다 보수화됐고, 특히, 가짜뉴스 단속에선 통합당보다 더 강경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를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 등 우파의 반정부 활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일 뿐이다.

민주당이 기본 시민권 문제조차 갈수록 보수적으로 되는 이유는 민주당이 10년간 집권을 하면서 진작에 지배계급 정당으로 확실하게 변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몰락 후 정치 안정을 확보해 반격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배계급이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나오는 올해 총선 결과로 민주당이 마침내 주류(지배

계급) 정당이 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견해이다.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이 됐냐는 점에서는 아직 그렇다고 하긴 어렵다.)

물론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에 큰 기여를 했던 진보진영 지도자들 일부가 정부에 협조해 온 덕도 봤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좀 더 내리면서, 개혁주의 지도자들도 그 질서에 부분 통합됐다. 기성 질서의 유지에 부분적 이해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의 추가 살해를 규탄해 더 광범한 미국 대중이 봉기하다

조지 플로이드 피살을 계기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투쟁이 3주째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조지아주 주도(州都) 애틀랜타시(市)의 시위대는 지난 3주간 외치던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에 라샤드 브룩스의 이름을 추가했다.

6월 12일 브룩스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러 외식을 나왔다가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의 드라이브루(자동차에 탄 채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신고돼 경찰에 사살됐다. 경찰은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브룩스의 등에 총을 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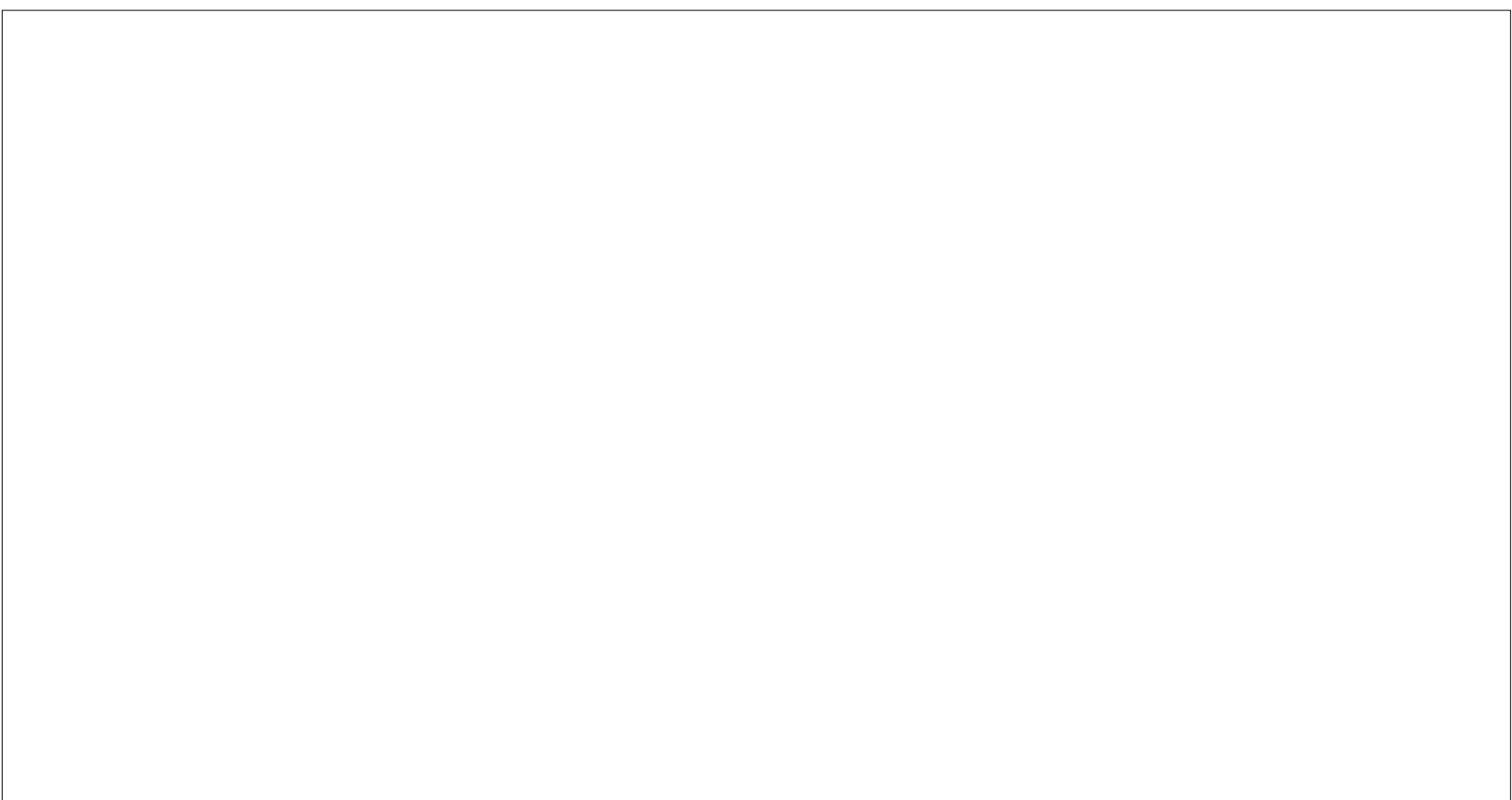
분노한 대중은 그날 즉시 규탄 시위를 벌여 브룩스가 사망한 도로를 봉쇄했고, 브룩스를 신고한 매장을 불태웠다. 바로 다음 날 브룩스를 살해한 경찰 개럿 톨프가 살인 혐의로 면직됐고(현장에 있던 순찰 파트너 데빈 브론슨은 유급휴직 처분을 받았다), 애틀랜타 경찰서장은 사임했다.

그러나 애틀랜타 시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로 봉쇄를 이어 갔다.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쏘 도로 봉쇄를 진압했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6월 19일 노예해방기념일 출근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이자고 호소했다.

브룩스의 아내 토미카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제 남편이 경찰을 쏘 죽었다면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종신형을 받았겠죠. [살해 현장에 있던 경찰] 둘다 감옥에 가둬야 해요.”

시위 참가자 마케이비언 오돔은 CNN에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끊이지 않아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때문에 매일같이 시위했는데도 말이예요.

“우리 뜻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애틀랜타 고속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은 아직 우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인종차별적 극우의 범죄도 다시 불거졌다.(트럼프가 이런 자들을 고무하고 있다. 관련 기사: 본지 325호 ‘인종차별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캘리포니아주 소도시 빅토리아빌과 팜데일(1시간 거리다)에서 흑인 청년 두 명이 나무에 목매달려 죽은 채 발견됐다.

쿠클럭스클랜 KKK단의 나무 교수형을 연상시키는 이 참혹한 범죄를 규탄하며 연일 시위가 벌어졌지만, 당국은 수사를 자살로 종결해 버렸다. 팜데일시 당국자는 뻔뻔하게도 항의 시위

대 앞에서 “자살 의심”이라고 할 걸 그랬다”며 “[인종차별적 살해라는 합의가 있는] 린치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되겠다”고 투덜거리려 시위대의 거센 분노를 샀다. 결국 시위에 밀려 팜데일시 당국은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해야 했다.

6월 1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만 5000명이 시위를 벌여 5월 말 경찰에 살해된 흑인 트랜스남성 토니 맥데이드를 함께 기렸다. 이 시위를 조직한 ‘흑인 성소수자 자문위원회’는 이렇게 밝혔다. “오늘 시위는 소수 인종이 겪는 불의, 체계적 인종차별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차별에 직접 맞서는 것입니다.” 뉴욕, 보스턴, 매사

추세츠 등 40여 도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 “흑인 트랜스젠더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외쳤다.

흑인 트랜스젠더는 미국에서 이중의 차별과 심각한 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다. 6월 9일(한국 시간) 하루 새 미국에서 흑인 트랜스여성 두 명이 잔인하게 살해됐다. 2019년 미국에서 벌어진 트랜스젠더 살인 중 91퍼센트가 흑인 여성이었다.(81퍼센트가 30세 미만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는 6월 12일 의사 자의로 트랜스젠더의 치료·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환자보호 및 부담 적정보험법’(‘오바마케어’)을 개악했다.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려 트랜스젠더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264호 ‘트랜스젠더를 법에서 삭제하려는 트럼프의 역겨운 시도’)

시위대 수천 명이 6월 14일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앞을 행진하며 “건강보험 개악 반대”, “트럼프·펜스 즉각 퇴진”을 외쳤다.

전투 태세

트럼프는 이번 항쟁의 불길을 잡으려 이제까지 미군 약 1만 7000여 명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게 했다. 이라크·시리아·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인 미군을 모두 더한 것과 비슷한 숫자다. 그러나 투쟁이 계속되면서 트럼프의 강경책은 정권 안팎에서 만만찮은 반발에 직면했다.(관련 기사 11면.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동참한 미국 노동자들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활동가 **숀 커밍스**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하는 구실을 살펴보고, 저항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하려면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6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집배 노동자 약 200명이 “우체국 노동자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와 함께 행진했다.

시위대는 미니애폴리스 레이크가(街)의 불탄 우체국에서 출발해 조지 플로이드가 피살된 현장까지 행진했다. [이 우체국은 5월 말 경찰 폭력에 분노한 시위대가 불태운 것이다. 그리고 이날 시위에 동참한 우체국 노동자들은 그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살해당한 현장은 플로이드뿐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의해 피살

된 사람들 모두를 기리는 장소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기 노조 지부 이름이 적힌 셔츠를 입거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참가했다. 이 시위는 브리아너 테일러와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살해당하고 저항이 벌어진 이래 노동자들이 벌인 수많은 작은 행동의 하나다. [브리아너 테일러는 올해 3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느닷없이 집에 침입한 경찰에게 총살당한 흑인 여성이다.]

미니애폴리스와 뉴욕의 버스 노동자들은 경찰의 살인과 계속되는 가혹 행위에 항의하는 노조 지부 차원의 공식적 행동과 비공인 행동에 나섰다. 트윈 시티즈에서는 통합교통노조(ATU) 1005 지부가 경찰 병력 수송과 연행자

호송을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9일 서부항운노조(ILWU) 소속 항운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항의 시위에 연대하는 뜻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9분간 작업을 중단했다. 역사적으로 서부항운노조는 미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인종차별 반대 활동을 벌여온 노조 조직이다. 이 노조 조직은 6월 19일 미국 서부의 항구 28곳을 폐쇄하기로 표결했다.

미국 전역의 교원노조는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을 철거하라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오리건 주의 초등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소규모 시위를 조직해, 주 정부에게 경찰 예산 증액을 폐기하고 그 돈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같은 교육 제도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경찰 예산 증대,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특히 흑인과 소수인종에게 피해를 준 긴축 정책

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통합교통노조(ATU) 미니애폴리스 지부 조합원 도니 존슨은 <레이버노츠>에 이렇게 썼다.

“노동자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부색만 빼면,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복지를 잃었습니다. 흑인 목숨을 위한 행진에 함께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많지만, 우리는 가난한 흑인의 이익이 곧 가난한 백인의 이익이라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보건의료, 임금 인상, 고용 안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자 투쟁이 등장한 것은 인종차별과 국가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에서 나타난 아주 신나는 변화이다. 노동계급은 운동 초기부터 함께했지만 대부분

개인으로 참가했다. 현재 노조 지역 조직들이 발표한 성명에 나오는 요구들 중에는 특히 경찰 예산 증액을 폐기하고 복지에 투자하라는 요구가 있다. 이는 경찰 활동의 외관상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서 경찰의 역할 자체를 문제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규탄 운동 측이 발표한 성명서들과 꼭 닮았다.

자본주의 국가와 그 국가를 대표하는 민주당과 연계가 깊은 노조 상층 관료들은 굼뜨게 반응했다. 미국 노총 AFL-CIO는 작가조합 등이 요구한 경찰노조 축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찰의 가혹 행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상의 방법은 경찰 내 가맹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다.”

AFL-CIO는 인종 차별과 분리 정책을 견지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흑인 트랜스젠더 목숨도 소중하다” 6월 13일 미국 밀워키 지역 교사들의 행진

본지 326호에 실린 ‘트럼프와 미국 지배계급 사이에 균열이 커지다’도 보시오.)

이 때문에 미국 권력층은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 실세들은 아직까지 이 투쟁의 열기를 자기 표발으로 온전히 포섭하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경찰 예산 삭감이 투쟁의 주요 요구의 하나로 제출된 와중에 바이든은 경찰 예산을 3억 달러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어이없게도 버니 샌더스는 바이든의 경찰 예산 증액 요구를 거둬고 나섰다. 샌더스는 민주당 상원의원 원내대표 척 슈머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어, “[민주당이] 경찰 지원을 확충해 우수한 경찰관들에 매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9일 〈뉴욕커〉와의 인터뷰에서는 “경찰의 구실을 재확립하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샌더스는 트럼프 같은 자가 절대

재선패선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생동하는 운동의 요구보다 집권 가능성 있는 민주당 권력층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그러나 샌더스의 이런 행보로는 인종차별적 경찰을 이용해 체제를 수호하는 데서는 공화당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는 민주당에 ‘분할’을 하는 효과 외에는 거들 것이 없을 것이다.

한편, 민주당 시장이 운영하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포틀랜드 등의 도시들에서는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삭감 예산의 세부 용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컨대 로스앤젤레스 시는 경찰 예산을 최대 1억 달러(약 1200억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LA 경찰 2019년 예산 31억 4000만 달러의 4퍼센트도 안 된다. 애초에 경찰 예산은 대중교통 예산(1억 8600만 달러), 빈곤층 의료 지원(5500만 달러), 청년실업 지원(2800만 달러)에 견줘 터무니없이 비쌌다.(관련 기사: 본지 326호 ‘경찰

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일까? 고쳐 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미국에서 불가침 영역으로 취급되던 “경찰 신화라는 갑옷에 금이 가”고, 기성 정치권조차 예산 삭감을 공언한 것 자체는 괜찮은 성과다. 미국 곳곳에서 몇 개월, 심지어 몇 년 전에 벌어진 경찰의 흑인 살해 사건이 속속 재수사에 들어가고 있기도 하다.

수많은 대중이 거리로 나와 “우리 목소리를 들어라” 하고 외치고서야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생겨난 것이다. “과거 범집행 기관이 [경찰의 흑인 살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 당국은 경찰을 비호하며 시민들에게 자체를 촉구하기 일쑤였다.”(〈뉴욕 타임스〉)

운동은 이제 막 담대한 첫걸음을 뗐다. 갈 길은 한참 남았다. 정치권의 꾀죄죄한 양보에 일회일비하기보다 거리 시위를 더 키울 때다. 노동계급의 투쟁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관련 기사 10면)

그리고 인종차별을 철폐하려면 본질적으로 인종차별과 불가분인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맞서야 한다. 혁명적 흑인 투사 앤젤라 데이비스의 말처럼, “흑인 해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미국에서 자본가 계급 전체를 타도하고, 자본가들의 착취를 보장하고 흑인을 예측시키는 수많은 전통적 기관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것뿐이다.”

이번 투쟁은 그런 급진적 방향으로 나아갈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 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길을 제안할 혁명적 좌파가 절실하다.(관련 기사 5~8면)

김준호 (Socialist Worker)(영국) 등 외신 종합



6월 9일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연대해 작업을 중단한 서부항만노조(LWU) 소속 항만 노동자들

다. 지부 차원의 연대 성명, 조직적인 행동, 버스 노동자들이 했던 것 같은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조직들은 이 운동을 전진시키고 진정한 변화를 쟁취하는 데서 일정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지배계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단지 표면적인 변화가 아

니라 진정한 인종적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의는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흑인과 소수인종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정의를 쟁취하는 것 모두를 뜻한다.

출처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웹사이트 / 번역 김지혜

미군 장성들이 트럼프와 갈라선 진정한 이유

존 뉴싱어

퇴역 해군 장성 제임스 매티스가 미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협한다는 공공연하고 전례 없는 비난을 했다.

매티스는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가 촉발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운동에 트럼프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열받고 소름끼친다”고 불평했다. 그는 트럼프를 나치에 비유하며 트럼프가 미국 국민을 분열 시키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또한 모두가 “트럼프 없이도 단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매티스는 그간 “성숙한 리더십 없는 3년이였다”고 말했다. 그 후 다른 퇴역 장성들도 매티스를 따라 서둘러 트럼프를 비난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매티스를 국방장관에 임명했고, 매티스는 왜 2년간 그 자리에 있었나?

트럼프는 장성들을 곁에 두면 자신도 강해 보일 거로 생각했고, 매티스만큼 적절한 사람은 없었다.

매티스는 해병대에서 43년간 복무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당시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 중 하나였던 2004년 팔루자 학살을 지휘했다. 미군은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도시에 백린탄(당으면 뼈와 살을 태우는 악명 높은 무기)을 퍼부었는데 이 화학 무기 때문에 기형아 출산이 계속되고 암 발병률이 여전히 높다.

매티스는 또한 한결같이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다. 오바마 정부 때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야전 사령관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중부군 사령관에서 해임됐다.

잔인한 발언으로 병사들을 고무한 일도 유명하다. “사람들에게 총 쏘는 건 재미있다.” “예의 바르고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라. 하지만 대결하는 자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등의 말들 때문에 “미친 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확실히 트럼프가 매력적으로 느껴만하다.

실제로 매티스는 전문적이고, 박식하고, 고학력자에, 미국 제국주의에 헌신적이다.

거부

그런데 매티스는 트럼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컨대 트럼프가 고문을 활용하려고 하자 [테러 용의자의] 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불법이어서 쓰면 안 되는 형벌이라며 거부했다.

매티스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특히 나토를 지키고 해외 미군기지들을 유지하는 데에 헌신했다. 그는 러시아를 미국의 세계적 지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여겼다.

매티스의 한 참모는 이런 평가를 했다. 매티스가 국제관계를 체스 게임으로 여기는 반면 트럼프는 가위바위보로 여긴다. 물론 이런 평가는 트럼



팔루자 학살을 지휘한 제임스 매티스

프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매티스를 비롯한 장성들은 애초에 트럼프에게 미국 제국주의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이해시키려 했다. 그 시도가 실패했을 때는 트럼프가 초래할 손실이라도 최소화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무지, 멍청함, 충동성, 모순, 부정직은 엄청났다.

매티스는 큰 성공을 하나 거뒀는데, 미국 군사비 지출을 오바마 시절 60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대폭 늘린 것이다. 이로써 세계 군사비 순위 2위부터 11위까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가 됐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이는 미국에게 동맹국이 더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트럼프와 매티스는 이란 핵 협정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매티스는 그 협정이 성공적이었다고 여겼지만, 트럼프는 나토 등 동맹들을 경시했다.

트럼프가 시리아 철군을 결정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온 유대를 끊어버린 최후의 작은 일이 됐다. 이제 트럼프 쪽 사람들은 매티스를 “온건한 개”라고 불렀고, 심지어 등 뒤에서 “작은 새끼 고양이”라고도 불렀다.

매티스는 참다 못해 사임했다.

그런 그가 지금 간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점은 대체로 핑퐁거리일 뿐이다. 장성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 특히 국제 동맹 네트워크와 그중에서도 나토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리라고 본다.

너무 큰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트럼프를 막으려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떨떠름하지만 민주당 후보 조바이든을 지지하기로 한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9호 / 번역 오선희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 ★ 일부 진보의 부정을 ‘나쁜사냥’ 사건으로 보는 것의 문제점
- ★ 정부와 진보진영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에 맞서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정원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 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교사들은 두세 호봉이나 낮아지고, 매월 수십만 원의 임금이 깎이게 될 판이다. 이런 개악은 해당 직종의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손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이런 조치가 “과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확보한다면서 교사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의 차별적 규정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2012년 7월 ‘비정규직 경력도 상통직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력 인정 비율을 상

향조정했었다.

심지어 교육부는 이런 규정 개악을 소급 적용해 이미 받은 임금마저 뺏아 내라고 한다. 이미 경기 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

최근 기간제교사노조에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가 10여 건이나 접수됐다. 그 액수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800만 원에 이른다.

이런 소급 적용은 완전히 부당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자신이 규정에 따라 수년 동안 지급해 온 임금을 이제 와서 잘못 적용했다며 교사들에게 토해 내라는 것은 부당한 책임 전가다.

가뜩이나 단기 계약이나 쪼개기 계약 등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더 잔인한 짓이다.

이중 잣대

정부의 위선적인 이중 잣대는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 시정을 위해 교육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때는 외면하더니,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는 데는 교육 공무원 관련 법과 규정을 갖다 대는 것이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각 부처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추경 예산의 많은 부분은 잘 알려졌다시피 정부가 기업들에게 수십조 원을 퍼주는 데 사용된다.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 배정됐다. 이러려고 교사 임금 삭감과 환수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불만이 매우 크다. 기간제 교사들은 이 문제를 기간제교사노조에 제보하며 함께 싸우기를 바라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부당한 임금 삭감 조치를 널리 알리며 항의에 나섰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임금 삭감과 환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자 5일 만에 13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가했다.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임금 삭감과 환수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동안전 활동 탄압에 맞서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 운동을 지지하자

권준모 현대중공업지부 산업안전보건위원, 소위원

현대중공업 사측이 현대중공업지부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

많은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 김경택 대의원이 속한 5분과 노동자들이 징계 철회 서명에 나섰고, 매일 아침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은 다른 분과로도 확대되고 있다. 분과동지연대회의 소속의 11개 분과 동지회가 연명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가 징계 철회를 공식 요구했고, 인사위원회 직전인 18일에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사측은 4월 27일 사망한 고 김민수 조합원의 병원비 수천만 원의 지급을 애초 거부했다. 김경택 대의원이 SNS를 통해 이를 폭로하자, 사측은 ‘원래 우리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김 대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의 진료비는 사측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에도 노사 합의로 (근로복지공단 승인 절차 이전에) 사측이 병원비를 대납해 왔다.

6월 15일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 간 안전 협상)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장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일



출근길 징계 반대 지지 호소하는 김경택 대의원

을 외부에 알리고, 사장이 직접 추진하는 일에 반대하고, (집단발병으로 인한) 잠수함 DF탱크의 작업이 계속 중지되는 데 화가 났다고 말했다.

사장이 예들려 말했지만, 이는 김경택 대의원을 겨냥한 말이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문제 삼아 보복 탄압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측은 최근 노동조합의 작업중지 범위 축소, 작업 환경 개선 없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 등 개악안까지 들고 나왔다.

이번 징계는 김 대의원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단속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를 위해 함께 단결해 저항해야 한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집단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몇 달 사이 5명이 산재 사망한 데 이어, 최근 집단 발진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얼마 전부터 LNG 이종연료 탱크(LNG DF탱크)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피부 발진을 앓고 있습니다.

DF탱크 용접 작업 과정에서 니켈과 크롬이 광장히 많이 나오는데, 측정 결과 노출 지수가 기준치의 3배가 나왔어요.

특히 니켈은 피부에 접촉하면 발진이 나타나고, 흡입하면 호흡기에 이상 반응을 일으켜 천식,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로, 결국 오늘(6월 16일) 노동부가 발진자들뿐 아니라 그 작업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지금 삼호중공업과 세진중공업 등에서도 하고 있어요. 특히 하청,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 걸 감안했을 때 우려가 큼니다.

사측은 외주화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고요?

지금은 제가 속한 특수선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측이 조선 부문으로 물량을 회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작업자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 대의원들이 노조에 요구해 작업중지를 하고(5월 2주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항의를 하니, 논란을 피해 하청에 주겠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업체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의 외주화’를 하겠다는 건데, 회사가 외주화를 추진하면 우리는 명확하게 반대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징계에서도 사측의 위선을 볼 수 있는데요.

사측은 유언비어 어쩌고 이유를 댔지만, 사실은 보복성 징계입니다.

특수선 노동자들이 작업중지 한 것에 사장이 상당히 불쾌해 했다고 해요. 또 제가 고 김민수 노동자가

죽었을 때 문서 조작, 병원비 전가 시도에 대해 폭로했어요. [사측은] 왜 회사의 문제를 밖으로 돌려 이미지를 깎아 먹었냐고 화도 났다고 해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건 사측이 한 짓입니다. 노동자들을 억울하고 어이없는 죽음으로 내몰고, 안전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투쟁과 요구가 많았지만 모르는 체했죠.

문재인 정부는 몇 년 안에 중대재해를 50퍼센트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빈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작업 중지 범위도 후퇴하고 있고, 특별근로감독도 아주 형식적입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응하려면, 현장에서 투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는 운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윤보다 안전을 위해, 노동자들이 같이 연대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